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 학교법인 등이 청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지역 고입 원서 접수 마감 외고·자사고 경쟁률 소폭 올랐다

서울 지역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입학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상승하거나 유지됐다. 올해부터 일반고와 함께 입시를 실시하면서 지원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으나 일반고와 중복 지원이 허용돼 그 영향이 상쇄됐다.

전국형 자사고 하나고는 경쟁률 하락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원·대일·명덕·서울·이화·한영 등 6개 외고의 정원 내 모집(일반·사회통합 전형) 경쟁률은 1.51대 1이었다. 지난해 1.34대 1보다 다소 올랐다. 학교별로는 일반 전형 기준으로 명덕외고가 2.16대 1(전년 1.51대 1)로 가장 높았으며 대일외고(2.03대 1), 한영외고(2.02대 1), 대원외고(1.76대 1), 이화외고(1.44대 1) 등의 순이었다. 서울외고는 0.96대 1로 가장 낮았다.

공립인 서울국제고도 올해 정원 내 경쟁률이 2.65대 1(모집 정원 150명, 지원자 398명)

으로 2.23대 1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정원 외를 포함한 서울국제고 전체 경쟁률은 2.64대 1(전년 2.22대 1)을 기록했다. 전국형 자사고인 하나고는 정원 내 모집 정원 200명에 470명이 지원해 2.35대 1의 경쟁률로 전년 3.67대 1보다 하락했다. 전형별로는 일반 전형이 남자 80명 모집에 158명이 지원해 1.98대 1, 여자 80명 모집에 253명이 지원해 3.16대 1, 사회통합 전형 남자 20명 모집에 29명이 지원해 1.45대 1, 여자 20명 모집에 30명이 지원해 1.50대 1이었다.

일반고와 이중 지원 허용 영향

서울형 자사고 21개교의 일반 전형 총 지원자 수는 8천73명으로 전년(8천519명)과 비교해 446명(5.2%p) 감소했다. 다만 올해부터 대성고가 일반고로 전환,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 369명 감소해 전체 경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일반 전형 기준으로 모집 정원에 미달인 학

교는 경문고(0.83대 1), 대광고(0.84대 1), 세화여고(0.95대 1), 송문고(0.80대 1), 현대고(남자, 0.99대 1) 등 5개교다. 미달 학교는 지난해 7개교(경문고 경희고 대성고 동성고 송문고 신일고 이대부고/남자)에 비해 2개교 감소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가람고(여자)로 2.95대 1, 배재고 2.08대 1 등이다.

서울 지역 자사고는 지원율(경쟁률)에 따라 '지원율 100% 이하, 지원자 전원 합격' '지원율 100% 초과 120% 이하, 면접 생략 추천 합격' '지원율 120% 초과 150% 이하, 추천 생략 면접 합격' '지원율 150% 초과, 1.5배수 추천 후 면접' 등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 지원자 미달 시 모집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 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단, 지원율과 관계없이 경문고, 장훈고는 전원 추천 선발한다.

당초 교육부는 일반고와 이중 지원을 금지해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에 대해 희망에 관계없이 결원이 있는 일반고에 배정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 등 9명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는 지난 6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7월 자사고의 이중 지원 허용을 발표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중은 평가이사는 "외고와 자사고 경쟁률이 후기고 선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외고나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할 경우 원치 않는 일반고에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상대평가 유지, 정시 모집 선발 비율 확대 등의 정책이 외고와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iang@naeil.com

특성화고 대규모 미달 속 인기 학과 쏠림 심화

서울 특성화고등학교 절반 이상이 지원자 미달로 모집 정원만큼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적성과 소질에 따라 소신 지원한 긍정적인 변화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학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70개 특성화고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 결과 54.3%인 38개교가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들 학교가 선발하지 못한 신입생은 1천709명이다. 전체 특성화고 지원자는 1만7천375명으로 모집 정원 1만5천502명보다 많았지만, 인기 있는 학교·학과로 지원자가 몰리면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원율이 높은 교과군은 디자인·문화콘텐츠(모집 정원의 153% 지원), 음식·조리(149%), 미용·관광·레저(134%), 건설(125%), 정보통신(114%) 등이었다. 학과별로는 영상음악콘텐츠과 실용음악과 게임개발과 자동차와 외식경영과 방송연예공연과 소프트웨어과 등이 인기 있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급감, 직업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무분별한 대입 선호 경향, 학과별 선호도에 따른 쏠림 현상 지속 등을 미달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반면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각자 소질과 적성에 따라 소신 지원을 한 결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인기 있는 학교와 학과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거나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분야라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다.

서울 강신중 문화직 학생의 경우 중학교 성적이 상위 1% 대의 최상위권으로 특목고 진학을 고민하다 부모 권유로 서울여상 금융회계학과를 선택했다. 최진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이나 경제에 관심이 많아 금융 관련 특성화고인 서울여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최진 학생은 장기적으로 재직자 특별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 금융전문가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꿈도 있다.

실업계고로 불리다 1997년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조항이 신설되며 명칭을 바꾼 특성화고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성화고 재학생은 현장 실습과 체험 위주 직업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게 된다. 서울 지역 특성화고는 2015년 이후 해마다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집 정원을 못 채운 특성화고는 2015년 2개교(전체의 2.8%), 2016년 10개교

(14.3%), 2017년 16개교(22.9%) 등으로 증가세다. 지난해에는 전체 특성화고 중 62.8%인 44개교가 신입생 2천79명을 뽑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미래 직업사회에 대비해 중학생이 선호하는 학과 개편을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445억8천만 원을 투입, 53교 1천637학급의 학과 개편을 단행했다”면서 “미래 지향적 학과 개편을 지속 추진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특성화고 국제화, 지자체·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진로직업 교육 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교육부 학자금 장기연체이자 은행보다 높아

감사원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학자금 대출제도 설계·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적발, 교육부 장관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일반상환 대출의 장기연체이자 금리가 연 9%로,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p 높았다. 특히 취업 후 상환대출과 달리 일반상환 대출은 대출한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도록 해 재학 중 부담이 크고, 장기연체 시 신용유 의자로 등록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신청자별 가구원 수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지난해 446만 원)만을 사용해 모든 가구의 소득분위를 구분했다고 지적했다.

초·중·고에 <시민> 과목 신설 검토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민주시민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 활동을 지원하는 법 근거도 마련된다.

우선 교육부는 학계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담아 내년 민주시민교육 목표와 기본 원칙을 담은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이 기준을 토대로 현행 교육과정인 민주시민을 가르치는 데 적합한 한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고에 <시민(가칭)>이라는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주시민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논술형 평가 도구 개발에도 나선다.

초·중·고생 희망 직업 다양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초·중·고교생 2만7천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희망 직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직업이 다수 등장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인터넷방송 진행자(유튜버), 중학생은 뷰티디자이너 연주작곡가, 고등학생은 뷰티디자이너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이 희망 직업 10위권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희망 직업 1위로 운동선수를 꼽아 기존 10여 년간 모든 학교급에서 부동의 1위였던 교사는 2위로 내려갔다. 학생 희망 직업 조사에서 매년 초·중·고 1위였던 '교사'는 중학생의 경우 19.8%에서 11.9%로, 고등학생의 경우 13.4%에서 9.3%로 떨어졌다.